

焦點企劃

對日技術依存改善을 위한 政策對應

대일무역 역조 및 기술의존은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당면 과제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역조 심화 현상은 일본을 지나치게 외부 경제로 활용한 양적 팽창주의의 과거 우리 경제 발전 방식에 기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상당한 수준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의존의 내용이 대일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현상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대일의존도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경제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둘째, 대일의존 문제를 양국 차원에서만이 아닌 냉정 이후의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대동에 주목하여 Global context에서 고찰하여야 하며, 셋째, 한쪽만의 논리가 아닌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살리는 공존 번영의 논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 호에서는 한일간의 새로운 기술·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대일의존의 핵심 산업 부문인 전자산업과 정밀소재산업의 대일기술의존 개선 방안을 다루어 보았다. 본고의 내용은 당 연구소에서 수행한 「대일기술의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근일 「한일간 신기술 경제 질서론」, 「대일기술 획득과 활용을 위한 방안」, 「전자산업의 대일기술 의존 개선 방안」, 「기계산업의 대일의존 개선 방안」, 「소재산업의 대일기술 의존 개선 방안」이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韓日間 經濟摩擦과 對日 技術接近의 새로운 視覺

이종윤¹⁾

1. 序

韓·日間 經濟交流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1965년의 韓日國交正常化 이후부터라 하겠다. 그 이후 韓·日間 經濟交流는 무엇보다도 輸出, 輸入 등 通商面에서 엄청난 量的 膨脹은 물론 去來 內容의 高級化를 실현시켰다. 또한 이러한 兩國間 交易의 變化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서 技術移轉, 直接投資活動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兩國間 經濟交流의 이러한 活潑化가 반드시 건전한 方向으로 展開되어 왔다고만 할 수 없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의 거대한, 그리고 累積的 對日 赤字額의 존재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累積적 對日赤字를 발생시키게 하는 한국 경제의 對日 依存性이다. 곧 보다 後發國인 한국은 지나치게 日本經濟를 外部經濟로 活用하여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으며, 日本은 이러한 측면을 최대한 韓國經濟로 하여금 쉽게 日本經濟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構造的 關係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당한 水準의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對日 依存構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巨大한 對日赤字, 그 背後의 要因으로서의 一方의 對日 依存關係는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서는 물론 日本經濟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2次大戰以後 世界經濟를 발전시켜 온 프레임워크(framework)가 다른아닌 自由·無差別·多者間의 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GATT·IMF 體制이며 이 體制下에서의 최대의 受惠者가 日本經濟이다. 그런데 日本經濟의 巨大한, 累積的인 黑子の 發生이 일차적인 要因提供者로서 작용함으로써 自由貿易秩序가 弱화·破壞되어 가고 그 질서를 대신하여 歐美에 의해 주도된 保護貿易主義·地域主義가 強化·擴大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인 것이다.

이러한 國際通商秩序의 변화는 自由貿易의 通商秩序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경제의 體質을

가진 日本經濟, 韓國經濟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된다. 따라서 인접한 국가로서의 韓·日은 소극적으로는 방어적 次元에서 적극적으로는 世界通商秩序의 自由貿易에로의 회복을 위해서 戰略的, 提携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韓國의 巨大한 對日逆調, 逆調를 持續化, 構造化시키는 對日依存體質을 形成시키고 가장 核心的 要素인 日本의 對韓 技術協力方式의 存在는 韓·日間을 파국적인 관계로까지 發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상호 견제하는 활동을 하는 등, 바람직한 協力體制構築의 방향으로 發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韓日間 經濟交流를 종래까지와 같은 垂直的, 依存的 關係가 아니고 水平的, 相互協力的 關係로 發展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技術移轉方式을 核心으로 하는 日本의 對韓經濟協力方式의 修正이 要求되며 동시에 韓國의 技術吸收力의 提高 등 自主的 技術開發能力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중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兩側의 노력에 의해서 韓·日의 經濟交流가 일차적 관계가 아닌, 相互協力的인 關係로 될 때 韓·日은 兩國共同의 課題인 共同市場創設 나아가서는 自由貿易地域의 擴大를 위해서 협력적 활동을 展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韓·日間 經濟交流의 水平的, 協力的 關係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를 위한 接近方法으로서는 무엇보다 韓·日 각각이 그간 어떠한 經濟發展方式을 추구해 왔으므로 協力的 이 아닌 摩擦關係를 증폭시키게 되었는데 대한 그 構造的 側面을 分析하는 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分析이 客觀的이고 體系的으로 이루어지면 韓國의 對日逆調 내지는 日本의 大韓技術移轉方式의 문제를 둘러싼 韓·日간의 視覺差異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韓·日間에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 상이한 見解, 나아가서는 대립의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視覺差異를 극복하고 문제의 本質을 韓·日이 공동적으로 認識하게 된다는 사실은 양국의 經濟摩擦로 인한 不毛의 消耗를 훨씬 완화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바른 解析을 위해 韓·日各各은 어떠한 努力이 要求되는가 하는 努力의 方向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努力도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일거에 큰 폭의 變化는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러한 協力的인 關係設定을 위한 實現 가능한 구체적인 實踐事項들의 꾸준한 集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本稿의 관심은 韓·日間 經濟摩擦解消의 核心이 技術移轉方式의 再設定 내지는 技術移轉의 促進에 있다는 認識下에 논의를 진행시킨다.

2. 韓日間 交流의 補完과 摩擦

韓·日 각각의 經濟發展方式에 의해서 形成되어지게 되는 韓·日 經濟交流는 그 各各의 특징으로부터 補完性과 摩擦性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 補完性的 측면부터 檢討해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韓國의 輸出主導型 成長政策을 當時의 潛在的比較優位分野인 單純勞動集約的 消費財生産의 輸出增大를 顯在的으로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 當該産業의 生産活動에 필요한 技術, 資本財, 原子材를 필요로 했으며, 또한 당시의 日本은 자국 경제의 高附加價值, 重化學工業化, 技術集約化를 위해서 技術移轉 直接投資 및 資本進出의 形態로 韓國經濟의 需要에 적극적으로 副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韓國經濟의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에 있어서도 그 推進方式이 기술한 바와 같이 能率化를 통한 多樣化라기 보다는 과시적 성장 모습을 對内外에 P.R하기 위한 弘報的 次元의 목적과 얽혀서 다양한 重化學工業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推進

에 있어서도 日本經濟는 자국 경제의 일층의 高度化에 필요한 安定的 市場確保라는 次元에서 이런類의 韓國經濟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副應하게 된다. 요컨대 韓國經濟는 日本經濟를 外部經濟로 活用하여 광범위에 걸친 重化學工業分野에 韓國企業이 비교적 손쉽게 착수 가능한 領域(주로 組立分野)을 중심으로 企業化를 추진하게 되는 데 日本經濟는 韓國經濟의 企業化에 필요한 技術 및 노하우(주로 周邊技術類)를 적극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生産活動에 필요한 施設, 機械類 및 核心技術이 體화된 基幹部品類를 販賣하는 式的 補完關係가 形成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韓國經濟의 發展構造의 하나로서 海外企業의 直接投資를 活用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도 韓·日間에는 상호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가령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韓國經濟는 기술한 바와 같이 單純勞動集約的 消費財産業의 比較優位期로서 同産業의 輸出增大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韓國經濟의 이 시기가 日本經濟로서는 當該産業類의 比較優位期와 일치한다. 더욱이 1971년부터 UN의 決定에 의하여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對해서는 無關稅 내지 低率關稅의 적용이라는 特惠關稅制度가 創設하게 되는 데 日本經濟는 이러한 조건에 더하여 黑子縮小의 필요성과 맞물려 單純勞動集約的 消費財産業의 對韓進出을 擴大시키게 된다. 이 경우에도 그 生産活動에 필요한 機·原資材는 日本에서 가져오는 것임으로 日本經濟로서는 一石三鳥, 四鳥의 效果를 거두는 것으로 되고 韓國經濟로서도 이들 기업의 유치를 통해 雇用增大, 技術導入 및 輸出增大 등의 效果를 達成하게 되어 兩國의 利益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무엇보다 기술한 바와 같이 韓國經濟의 發展方式이 日本經濟를 外部經濟로서 活用하여 經濟成長을 추구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高度의 日本經濟依存性으로 인해 韓國經濟의 成長에 따른 對日派生輸入을 加速시키는데 비해 日本經濟의 成長方式은 應行形態的 接近方式 내지는 원세트主義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극히 輸入抑制型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兩國의 成長方式의 差異는 韓國의 對日逆調를 擴大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兩國의 필연적인 摩擦要因이 存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日本經濟의 강력한 系列 下請制度의 존재, 複雜한 폐쇄적인 流通構造의 존재는 韓國製品の 對日輸出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종의 制度的 裝置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韓國經濟의 지나친 多樣化 추구는 그에 따른 對日誘發輸入增大라는 韓·日間 補完的 側面도 존재하면서도 이렇게 重化學工業分野에의 다양한 進出, 그나마도 각각의 기업들이 최소 한도의 國際經濟單位가 되도록 建立되어 內需市場의 狹小性和 관련하여 輸出比重을 높이게 됨에 따라 部分的으로 韓國經濟의 實力以上으로 日本企業과 輸出市場에서 부딪히는 구조로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韓國經濟가 能率化를 통한 多樣化가 아닌, 다양화 以後 각각의 분야에서 輸出競爭力強化의 필요성에 能率化를 추구하게 되는 데 이에 따라 核心 尖端技術의 需要가 급속히 증대하게 되어 同技術에 대한 移轉要求를 강화시키게 되어 核心尖端技術의 移轉 문제를 둘러싼, 韓·日間の 대립이 尖銳化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經濟의 分配構造의 歪曲과 관련하여 高所得層需要를 겨냥한 高級材의 國內代替化를 推進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도 한편에서는 同製品的 生産에 필요한 機械類, 部品類는 대체로 對日輸入하게 되어 韓·日間に 補完關係를 形成하나, 가령 韓國自動車産業에 있어서 輸出品 종류의 범위가 主力部門인 小型車段階에서 점차 中形車에로의 比重을 확대시키게 되자 日本차와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日 各各의 經濟發展方式은 兩國間에 補完性和 摩擦性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간 摩擦構造속에는 한국경제 운영 방식의 실력 이상의 돌출에 의한 部分과 日本經濟 運營方式의 지나친 自國中心主義 내지는 協力的 補完意識의 缺如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兩國 공히

자국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마찰은 극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兩國의 利害關係上 불가피하게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경우조차도 倫理的 合理性에 입각한 中長期的 調整 방향이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經濟摩擦을 보는 韓·日間 視覺差異

韓日間摩擦에 대한 兩側의 視覺에는 상당한 認識의 差異가 存在하고 있다. 兩側의 주장을 통해서 대체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기술이전과 관련한 韓國의 對日接近方式이 韓國의 經濟發展方式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對日技術移轉을 요구함에 있어서 韓國經濟의 內的 必要性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評價할 때 얼마나 合理的인 優先順位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韓國經濟의 內的 必要性으로 보아서는 보다 우선시켜야 할 기술의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시적, 선전적 차원에서 優先順位가 낮은 기술의 종류를 무리하게 요구함으로써 일으키는 經濟摩擦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러한 側面과 관련성을 갖는 것이지만, 特定技術을 導入함에 있어서 當該技術을 吸收·消化 나아가서는 改善할 수 있는 內的吸收能力을 어느 정도 蓄積하고 技術導入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韓國의 對日接近이 어느 만큼 그들의 構造的 實態를 파악한 合理的 接近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內的 環境條件을 정비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쪽이나 하면 日本經濟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는 韓國經濟의 입장에서 日本經濟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월등하게 강하다는 점은 명백하며 그런 의미에서 韓國側 입장에서 불필요한 摩擦要因은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한 일본으로부터의 技術 및 經濟協力을 자연스럽게 誘導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日本의 對韓接近方式에 있어서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를 의식한 과잉 방어적 요소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資本主義的 經濟運營方式은 自國內에서는 물론, 國家間에 냉정한 合理的인 競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企業이라도 자사의 가까운 장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行動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現實經濟에서 잠재적 競爭企業의 出現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2次大戰 以後에 있어서 국가간의 經濟行動方式이 競爭과 同時에 조화로운 協力的 側面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日本企業의 行動方式을 評價한다면 韓國經濟가 日本經濟의 下部構造적 地位에 머무는 한 극히 協力的이며 나아가서 그러한 상태를 定着化, 構造化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그것이 韓國經濟에도 도움이 되는 經濟 및 技術協力을 적절히 구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對韓技術移轉實績을 평가해 보면 양적으로는 韓·日 兩國 공히 日本의 寄與度를 인정하면서도 質的側面에서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韓國企業은 강하게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가령 미국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을 받는 경우에는 技術移轉에 따른 파생 수입을 그렇게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음에 비해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에 있어서는 반드시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派生輸入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經濟 내지 日本企業의 이러한 行動方式과 관련하여 韓國經濟 내지 企業이 日本으로부터의 獨立的, 水平的 發展과 관련하는 技術移轉에 대해서는 극히 인식할 뿐 아니라 그런 류의 韓國製品の 出現 내지 對外進出에 대해서는 일련의 구체적인 事例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덤핑 공세 등 동원 가능한 手段을 活用하여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해 온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日本經濟 내지 企業의 이러한 行動에 對해 보다 後發國으로서 일본에 개치업해 가는 韓國經濟 내지 企業의 입장에서 볼 때 資本主義的 競爭論理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120~30년의 近代化經驗을 통해서 技術, 資本蓄積 및 經營技法을 익혀온 日本企業이 겨우 30年 정도의 近代的 企業活動經驗 밖에 없는 韓國企業에 대해서 너무 인식한, 내지는 너무 과잉 방어적

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통틀어서 資本主義的 經濟秩序下에서 競爭 내지 摩擦의 側面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韓·日間에 회피 가능한 마찰, 商度를 넘는 과잉 방어성에서 오는 마찰적 측면은 서로의 노력에 의하여 극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작금의 국제 통상 환경이 양국의 協力的 側面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 인식으로부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4. 經濟摩擦 解消을 위한, 韓國의 새로운 對日技術接近方向

韓·日間經濟摩擦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된 兩國間經濟協力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核心的인 要素로서의 韓國의 對日技術接近方式이 어떻게 재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은 日本 내지 日本企業의, 政策態度를 當爲論으로 설득해 봐야 아무런 效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條件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日本企業이 지나치게 부메랑 效果를 의식하여 尖端産業 등 高度化 된 産業分野에서는 技術移轉을 극히 꺼리며 그리고 技術移轉의 可否를 決定하는 기본적인 決定變數는 자국 경제 내지는 자기 기업에 當該技術의 移轉에 의해서 어느 만큼 利益을 발생시킬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주어진 것으로 하고 日本技術에의 새로운 接近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認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接近方向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技術移轉과 관련한 韓·日兩國의 經濟的 상황을 객관적으로 分析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經濟는 최근 이른바 거품(버블)經濟의 붕괴 이후에 초래된 不況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現狀이고 그들의 기본적인 構造는 日本經濟의 특징적 發展方式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比較劣位産業을 다른 先進國의 경우에 비해 포기 내지는 축소시키면서 보다 高度化된 産業構造를 추구해 간 것이 아니고 比較劣位産業을 최대한 合理化, 能率化, 自動化, 高級化시켜 가는 식으로 온존시키면서 産業構造의 尖端産業化, 이 尖端産業의 比較優位化를 追求해 감으로써 튼튼한 産業基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産業化의 추구 결과 日本의 産業構造는 이른바, 全力位産業構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所得增加에 따른 輸入彈力值가 낮은 農産物, 鑛産物 등 一次産業을 除外한 製造業內에서는 比較優位産業은 존재하지만 比較劣位産業은 存在하지 않을 정도로 比較優位産業도 상대적 의미에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存在는 日本經濟로 하여금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노증시키고 있다. 즉 거대한 규모의 국제 수지 흑자 상태의 지속화, 극심한 人力不況, 自國通貨인 円貨價値의 지속적 상승. 이에 따른 달러 표시, 高物價 상태의 향상화 등이 그것이다. 日本經濟의 이러한 특징적 구조는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수직적, 수평적 國際分業을 실현하기 위한 産業 재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産業 재배치의 潛在的 必要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면에서 적절히 보완 關係를 형성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를 찾지 못해 이러한 무리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韓國經濟는 發展方式의 展開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能率貨를 통한 多樣化가 아닌, 과시의 목적이 내포된 非能率的인 상태인 채로의 지나친 多樣化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産業構造의 高度化, 尖端技術化를 추구해야 할 필요 이상으로 既存産業의 能率化, 合理化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能率化, 合理化의 필요의 一環으로서 産業組織의 면에서도 지나치게 組立産業中心으로 그리고 大企業中心으로 發展시켜 왔기 때문에 그 組立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中心企業型 部品類産業은 극히 취약성을 노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技術集約性 部品類에 관한 압도적인 비중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日本이 歐美經濟를 캐치업하기까지의-대체로 1970年代까지 - 技術開發의 性格은 기술한 바와 같이 歐美로부터 導入한 技術을 어떻게 하면 日本的 條件에 맞도록 改良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力點을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日本的 條件이라함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核心的인 측면은 資本 및 資源의 부존 상태가 극히 빈약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그들은 源泉技術이 體화된 機械, 生産設備, 生産力法中에서 資本節約, 資源節約이 가능하도록 改良해 갔으며 그러한 技術改良을 거듭하는 과정의 產物로서 급기야는 工程 革命이라고 불리는 段階까지 도달했는데 바로 이 점이 日本企業의 강력한 對外競爭力의 源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性格의 기술이야말로 지금 韓國經濟가 가장 절실히 補強시켜야 할 취약점이며 이런 類의 技術導入에 관한한 韓·日間에 마찰을 일으킬 측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類의 技術은 個別技術이라기보다는 시스템技術의 경우가 많으며 매뉴얼(manual)을 통해서 移轉될 수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술을 體化하고 있는 技術人力을 통해서 일종의 맨-투-맨(man-to-man)式 方法으로 移轉되기 쉽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이런 技術特性에 맞는 技術導入體制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日本技術에의 臺灣식 接近方式이 韓國人의 氣質에 상당한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臺灣의 이러한 接近方式이 그들의 강력한 輸出競爭力을 구축하게 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우리로서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類의 技術導入은 組立部門擔當의 大企業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韓國經濟의 취약 부문인 中小企業部門을 育成, 活性化함에 있어서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 日本中小企業들 中에는 日本經濟의 円高 경향으로 인해 生産立地를 海外로 이전시키고 싶은 企業들이 적지않게 存在하고 있으므로 工業團地의 조성을 비롯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통해 그들 企業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韓國中小企業과의 合作으로 유도하면 韓國中小企業部門으로서의 획기적으로 技術導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類의 技術移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韓國中小企業의 技術水準을 높히게 되면 기술한 바와 같은 人力不況, 円高의 進行이라는 日本經濟의 構造的 특징에 비추어 部品類 레벨에서의 製品間, 工程間貿易, 곧 韓日間 水平的 分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1985年 9月 프라자 합의에 따른 円貨에 대비된 元貨의 대폭적인 評價切下는 전자 제품, 자동차 제품 등 日本의 核心的 産業을 중심으로 円高克服의 次元의 韓國에의 활발한 直接投資(특히 勞動集約的 部品類生産의 中小企業들) 및 韓國으로부터의 中間材, 그리고 完成材의 購入이 큰 폭으로 이루어짐으로써 韓·日間 水平的分業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그 以後 元高의 進行, 賃金費의 上昇 및 인플레이션 등의 발생으로 水平的 分業現狀이 크게 후퇴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技術的인 側面에서 韓·日間 水平的分業을 확대시킬 수 있는 潛在力이 크게 신장됐다는 점이다. 韓國의 對日貿易이 水平的 分業의 확대를 통해서 對日逆調의 축소, 나아가서는 均衡으로 수렴되게 하는 것의 通商政策的 次元에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潛在力을 최대한 伸張시켜 안정되고 확고한 水平分業構造를 구축하기 위한 政策的 環境助成作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곧 이를 위해서는 技術 내지 品質競爭力의 면에서 어느 정도 水平分業을 擴大시킬 수 있는 품목을 明確化하여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價格競爭力의 제고를 위한 與件의 助成 및 이들 품목에 집중된 技術開發力의 強化를 통해 安定的인 水平分業의 可能性이 확인되면 日本으로서는 當該部門에서의 産業調整을 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關係는 결과적으로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技術移轉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될 것이다. 技術移轉에의 이와 같은 接近方法이 갖는 의미는 技術移轉의 핵심적인 動因이 自社の 實益極大化 내지는 損失의 極小化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은 확실하며 따라서 水平分業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日本의 當該分野에서 損失極小化的 차원에서 韓國企業에의 協력을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시킨다는 것이다.

尖端技術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韓國企業 내지 技術人力을 가능한 日本으로 進출시키는 방법

을 통해서 尖端技術의 개발과 관련한 그들의 社會間接資本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接近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日本에서의 技術研究所設立 및 尖端技術을 보유한 限界企業에 접근하여 그들과의 合作企業을 설립하는 등을 통해 尖端技術의 共同開發 및 그들과의 共同開發 科程에서 韓國技術人力의 技術開發力을 強化시키도록 유도한다. 테크노-마트 등 그들의 技術情報原에 조직적이고 體系的이고 파고 들어가 수집한 技術情報를 韓國의 當該技術의 開發企業에 전달될 수 있도록 日本의 技術源과 韓國의 技術開發企業과의 네트워크를 정비시킨다.

韓國의 技術系日本留學生 및 技術系在日僑胞를 조직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日本의 技術源에 파고 들어 가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多角的으로 조성시킨다. 日本에의 技術分野留學을 技術 및 理論水準에 있어서나 語學的인 면에서 충분한 吸收能力이 있는 技術人力을 日本의 學校, 研究所 내지는 技術源이 存在하는 관련 기관에 대대적으로 그리고 다년간 파견하면 엄청난 技術移轉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接近方法의 의미는 그들이 막대한 코스트를 投入하여 개발한 尖端技術의 경우 좀처럼 移轉하지 않으려 함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技術類에 관해서는 그들 속에 파고 들어서 韓國의 흡수력 높은 技術, 經濟組織으로 하여금 日本의 尖端技術資源을 몸에 체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韓·日은 語學的, 情緒的으로 이해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므로 組織的이고, 體系的으로만 접근하면 상당한 成果를 거두게 될 것은 확실하다.

日本企業의 對韓進出 내지는 技術移轉과 관련하여 지나친 行政指導가 그들이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그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 力學關係上 韓國企業의 力不足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 기업에 극히 유리한 條件으로 技術移轉協商이 진척되기 쉽다는 점에서 과거의 日本이 그랬던 것처럼 行政介入 그 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介入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적지 않은 介入, 내지는 行政의 未熟이 원활한 技術移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므로 행정 개입의 再整備가 요한다고 하겠다.

對日技術導入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종래까지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에만 관심을 가졌지 導入된 技術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吸收하고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日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韓國的 條件에 맞도록 再改良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技術導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효율적 흡수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離職率을 축소시키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가 要求된다고 하겠다. 離職率이 日本企業의 경우에 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臺灣의 경우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技術吸收를 그 만큼 低下시키고 있으므로 終身雇用制 年功序列制度의 엄격한 運營 및 企業間 스카우트의 최대한 抑制 등을 통해 離職率을 극소화시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導入된 技術의 經濟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의 신속한 傳播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日本企業의 경우는 點에서 線으로, 다시 面으로 빠르게 擴散시키고 있는 데 비해 韓國企業의 경우는 點에서 點으로 이어지는 水準에 머물고 있어 韓國全體로서의 技術水準向上을 그 만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을 克服하는 방법으로서는 小集團活動의 活性化, 企業內 各部分間의 원활한 情報시스템의 確立, 나아가서는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協力體制의 強化 및 企業間 共同研究의 장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導入技術의 消火, 吸收段階에 머물지 말고 韓國經濟의 條件에 맞도록 일층 改良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技術의 導入을 日本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技術 그 자체만의 導入에 그치지 말고 技術導入期間이 다소 長期化되더라도 當該技術을 날게 한 技術開發力까지를 흡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韓國企業의 技術開發 체제를 擴統, 強化시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企業의 次元에서 기술 개발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럼 技術導入企業의 技術能力 내지는 技術開發體制를 外國技術導入의 중요한 심사 기준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술 도입을 신청하는 기업으로서는 技術能力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 체제의 整備를 통한 기술 개발력의 강화에 가일층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술 도입은 사람 對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특히 일본인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信賴感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 점에 있어 한국의 일부 기업인들이 당초에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不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안 받는다면 별 문제지만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信賴回復을 위한 노력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技術情報의 알선, 내지는 특히 中小部品 企業에의 技術移轉에 따른 技術指導를 해줄 수 있는 기술컨설팅회사의 出現이 크게 요구된다. 日本的 技術의 특수성 내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移轉된 技術이 어느 정도까지 흡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적지않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여기에 그 효과를 높히게 해 주는 기술컨설팅회사의 存在는 상당한 社會的 需要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5. 結論

韓日間 經濟交流는 거리적 인접성 및 歷史的 特殊性에 더하여 經濟的 強한 補完性으로 인해 1965년의 韓·日國交正常化 이후 엄청난 量的 팽창을 보여 온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韓·日兩國은 다 같이 後發國的 狀況에서 經濟成長을 추구해 왔지만 보다 後發國인 韓國이 상대적 先發國인 日本의 經濟水準에 캐칭업해 가는 過程에서 兩國間 經濟交流는 補完的인 면과 동시에 摩擦的인 면을 확대시켜가고 있다는 사실 분명하다. 그 마찰의 性格은 資本主義的 競爭의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적지않은 경우가 韓國의 吸收能力을 초과한 經濟成長方式으로 인해서, 그리고 日本의 과잉 방어에서 비롯된, 말하자면 合理的인 관점에서 입각하여 評價해 볼 때 회피돼야 할, 내지는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經濟摩擦의 대상은 韓國의 巨大한 그리고 지속적인 對日逆調의 문제와, 그것의 背景的 存在로서 韓國의 對日技術導入의 不振性이다. 對日逆調의 해결을 위한 接近方法의 하나는 양국이 각각 처해 있는 條件과 관련시켜 볼 때 하루 빨리 종래까지의 垂直的 補完關係로부터 水平的 補完關係로 轉換시키는 것을 통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韓國의 日本技術에의 接近方法을 보다 合理化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接近方法의 再定立과 관련하여 우리가 分明히 해야 할 점은 일단은 日本 내지 日本企業의 政策態度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對策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인 것이다. 韓國企業이 日本으로부터 導入을 필요로 하는 技術을 대체로 工程, 生産技術과 尖端·核心技術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의 技術導入 보다 후자의 技術導入이 더 마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現段階의 韓國經濟에 있어서 前者의 技術이 극히 필요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까지 韓國企業이 當該技術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합리적 接近을 해 왔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類의 技術의 成功的 導入은 韓國産業의 競爭力基盤을 크게 強化시키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韓日間 水平的 分業關係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 확실히 되므로 生産·工程 技術에의 보다 적극적인, 보다 合理的인 接近策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尖端·核心技術의 導入과 관련해서는 導入을 요구하기 보다 韓國企業 내지 研究·技術 인력이 日本에 진출하여 尖端技術을 창출해 내는 그들의 社會間接資本의 적극적 活用 내지는 그들의 기술 개발 원천에 파고드는 類의 接近方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잉 방어적 성격을 띤 日本企業의 對韓接近方式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本稿

에서는 일단 그들의 行動은 주어진 것으로 하고 주로 韓國의 對日接近方式에만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요컨대 技術的인 측면에서 韓國經濟의 필요의 所在를 객관적으로 明確化시키고 나아가서 技術導入對象으로의 日本經濟의 性格에 대한 정확한 分析위에서 韓國의 對日技術導入戰略이 수립돼야 보다 合理的接近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보다 實利를 높이고, 보다 摩擦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주석 1)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